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6년 3월 31일(금)

3th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조직혁신과 강화에 총력 기울일 것”

500여 대의원 2006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모인 대의원 500여명이 지리산수련관에 입소한 가운데 2006년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다.

22일 입소식에서 지재식위원장은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강화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며 “조합을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대의원들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으로부터 노사관계로드맵과 KT노동조합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민주노총의 현재와 KT노동조합이 걸어온 길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저녁 식사후 전국대의원과 위원장이 간담회 시간을 갖고 인력구조정 소문에 대한 질문, 대학학자금 등의 복지사항에 대한 질문 및 건의사항,현장의 생산성 달성에 따른 고충,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전환직 문제등 현장의 고충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비보직 3급 명예퇴직 실시소문에 대한 대의원의 질문에 위원장은 인력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당사 쟁의발생을 결의해서 파업에 돌입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관련기사3면>



23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의원대회가 시작됐다. 지재식위원장은 대의사를 통해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조합간부가 되자”고 역설했다. 이어 ▲복수노조 대비 ▲조직 혁신 ▲교육사업강화 ▲연대활동강화 ▲경영참여 등의 의지를 밝혔으며 사측에게는 ▲조직통합(지사내 네트워크) ▲장계대사면 등 감성경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핵심인 기간 사유제한의 문제는 바로 정규직인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의 핵심은 방송통신의 개방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권침해이며 통신의 중심에 있는 KT역시 가장 큰 당사자이다”라고 역설하며 “민주노총의 순환과업에 함께 참여해서 내부의 갈등들을 없애고 하나의 단결로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KT남중수 사장은 축사를 통해 “신뢰가 가장 큰 경쟁력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노사관계의 신뢰에 대해 밝혔다. 이후 11시에 시작된 본대회는 재적대의원 422명중 415명의 참석으로 개회가 선언됐다. 본대회가 시작되자마자 긴급대의원안이 제출됐으나 토론끝에 “이해관 조합원은 즉시 신분보장금을 중지하고 제명한다. 단, 제명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

한다. 유덕상 조합원은 신분보장금 지급을 금지하고 제명하되 그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상정 의결됐다.

이어 2호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호 2006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이 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4호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은 좀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안건 철회가 이뤄졌다.

또한 5호 임원 및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6호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동시투표로 진행됐다.

임원 선출을 통해 김병탁 사무처장, 최광수 정책기획실장, 류춘용 조직처장이 인준됐으며 회계감사는 정윤길(강북지방본부), 유기수(강남지방본부), 조상환(서부지방본부), 임태복(부산지방본부), 김진욱(전남지방본부), 이광욱(전북지방본부), 오영천(제주지방본부)이 선출됐다.

이어 중앙위원에는 이윤근 등 4명이 선출됐으며 중앙집행위원회에는 문순홍 등 38명이 선출됐다. 민주노총 파견대의원(43명) 및 후보대의원(80명)에는 윤준상 등 123명과 IT연맹 파견대의원(19명) 및 후보대의원(35명)에는 지재식 등 54명을 선출했다.

보수 양당의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냈다

4월 비정규개악법 처리 총파업으로 저지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극인 비정규 개악법에 맞서 총파업 전개하고 결국 2일 국회 본회의의 처리를 막아냈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 28일부터 수도권 조합간부를 비롯 전국의 조합간부들이 전국 동시차별집회에 적극적으로 결집했다. 특히 조합간부들은 열린우리당이 3월 2일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호언함에 따라 늦은 밤까지 국회앞을 지켰다. 이날 날씨는 영하6도까지 내려가고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졌지만 동지들

의 몸을 의지하면서 결의를 높여갔다. 마침내 밤 9시 비정규개악법이 본회의에서 무산되고 4월로 연기됐다고 알려지자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외쳤다. 또한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이라며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추운날씨에 아스팔트길에서 고생한 간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조합간부들을 격려한 뒤 “비정규 개악법을 막아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보다 더 힘든 추위를 견뎌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개악법을 막기 위해 정

규적이 더 거열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연맹 박흥식 위원장도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쟁대오를 조직해 주신 KT노조 동지들을 비롯한 단원노조 간부님께 뜨거운 동지애를 전한다”고 말하고 이제부터 싸움은 “비정규 투쟁의 끝은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비정규 보호입법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6일 총파업을 전개하고 각연맹별 순환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현장 IT엔지니어 업무용 PDA(RIMS폰) 단말기 지급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2005년에 2500대를 지급한데 이어 2차로 2552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기종: 삼성 PDA(SPH-M4300) (가죽케이스 포함)
- 지급 시기
 - 수도권 지역본부, 연구소, 망관리본부 (922대): 2006.4.3
 - 부산,대구,강원,제주본부 (834대): 2006.4.4
 - 전남,충남,전북,충북 (796대): 2006.4.5
- 지급대상
 - 2005년 미지급된 현장 IT엔지니어, PSDN,xDSL 등 개통 고장수리 현장 IT엔지니어, 전용회선(데이터포함)개통, 고장수리 현장 IT 엔지니어

KT우리사주배당금지급

- 지급일자: 2006. 3. 31(금)
- 지급주식: 조합원계정 및 조합계정 주식
- 지급율: 주당 2,000원
- 지급계좌: 개인별 급여별도 계좌로 입금

* 단 사주압류자 및 미상환퇴직자 부분상환 처리 대상자는 지급보류

사측의 명퇴 강요, 파업도 불사하겠다!! 일부 경영진의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움직임, 사전에 차단하라!

- 1/4분기 정기명예퇴직을 앞두고 개별면담 등을 통해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전직원의 5% 퇴직계획이라는 괴소문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명예퇴직 강요가 지속될 경우 전면 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또한 1/4분기 정기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 또한 관리자들에게도 경고한다. 실업급여 지급이나 6개월 전직휴직 등의 말로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실업급여 지급, 전직휴직은 조합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 그렇지 않아도 KT는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남중수 사장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며 현장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조합원들은 직영을 확대 등으로 날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사측이 고용불안까지 가중시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의의가 의심스럽다.

- 또 하나, 회사의 클린마케팅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 경영진의 영달을 위해 비영업부서 상품판매가 다시 재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PCS 판매로 경험했듯이 상품판매 강제할당은 허수경쟁과 내부경쟁 심화, 조직불화를 낳고 KT 사업 자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 이에 노사는 2004년 비영업부서 상품판매를 전면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부 경영진에 의해 은근슬쩍 상품판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경영진에 대해 해사행위 및 KT를 팔아먹는 매관행위자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처단을 해야 할 것이다.
- 그동안 KT는 현업기관의 과잉충성, 허수경쟁 등으로 큰 몸살을 겪어왔다. 이제서야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다시 거짓정보와 과잉충성의 광풍이 현업을 뒤덮고 있다. 이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의지 표명과 함께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에 대한 사측의 면담이나 권고 등 강요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통방융합, 부처간 이해관계로 국민편익은 뒷전

정부는 조속한 규제기구 및 법제정비로 정보민주화에 앞장서야

디지털 컨버전스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통신방송 기구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가 상용화됐고 IP-TV 등의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정책과 규제 및 지원이 통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다각화된 법령과 지원·규제기관은 미디어 융합적 서비스에 대하여 관찰권 경쟁과 중복적 규제를 야기하면서, 신규서비스 도입을 지연하거나 사업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통신방송관련 정부부처 및 기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전파방송기술·정보화기획 등을 담당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에 따라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육성, 연구개발, 통신산업규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통신위원회가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문화관광부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방송광고 관련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산하기관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방송광고공사 있다.

방송위원회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 인허가와 함께 방송평가,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의 무부과, 방송발전기금 지원 등 방송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독립기구이다.



비람직한 방향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망 융합은 통신망과 방송망 허가권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중복규제 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위 요구나 TV를 전송하는 무선통신사업자들의 방송사업자 지위요구가 그 사례가 된다. 둘째, 서비스 융합은 융합형 신규서비스에 대한 관찰권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통신의 개념은 방송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독점적 규제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시작된 논쟁 같은 서도, 그 보다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까닭에 더욱 혼란스러운 것이다. 셋째, 사업자 융합은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에 대해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통신기업이 방송사업자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강한 대기업인 때문에 방송산업 지배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이다.

그러나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은 통신방송 융합의 새기술이 기술과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구조개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규제기관 설립에 관심이 집중돼 정착 중요

통신방송기구 설립에 대한 입장차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위상	●정부와 위원회 이원화 ●정부부처 장관이 통제권한 보유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협의체위원회
구조	●정책·정부부처·규제·위원회	●정책·규제·지원 기능 통합하는 단일구조
유사사례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정책과 규제 분리 형식	●미국 FCC와 같은 형식
방송통신기구 개편위원회	●국무총리 자문기구	●대통령 자문기구
주요주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공익성 개념 재정립 필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 교차진입 허용	●공공성 공익성 강조

한 통방융합환경에 맞는 정책대안 모색에 소홀해 질 수 있다. 현재는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사업자의 융합으로 역무간, 산업간 경계를 해체시키고 기존의 역무별, 산업별 진입장벽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요구가 고도화, 다양화되고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결정권이 중요시됨에 따라 통신방송산업의 패러다임도 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구도로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기관의 통합에 있어 가장 우선돼

야 할 원칙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시장과 산업성의 논리에 의해 공공성 공익성이 배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공성 공익성에 매몰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산업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통합규제기구의 쟁점은 무엇인가?

멀티미디어 전반의 대변혁 예고

이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 준비단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5월 통신방송융합추진위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방융합추진의 논의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지 알아보자.

주요 논의 쟁점으로는 통합규제 기구의 성격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통합기구의 모델과 관련해 행정부처가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방송위원회는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방송위는 정책과 규제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혼선으로 통방융합과 시장개방, 국제화시대에 신속한 대처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방송위원회가 행정부처의 산하기구로 전락하면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도 예상된다.

방송법과 통신 관련법을 통합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다. 이미 양방향TV는 데이터방송으로, 모바일 TV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방송법에 포함됐기 때문에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제3의 법률(광대역

융합서비스법)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사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수평적 규제 틀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수평적 규제 틀을 도입해야 한다며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등 3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수평적 규제방식의 장점은 기술적으로 중립적이며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관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융합이 가속화되는 네트워크 및 전송 영역과 별도로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규제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이밖에 통방융합추진위가 출범하면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통방융합 관련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또 신문과 뉴스통신, 방송, 영화, 유무선통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개로 구성하고 있던 시장이 단일한 멀티미디어 시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융합 논의가 방송과 통신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외국의 통방융합에 대한 정책

이종매체간 교차소유 허가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외국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면 우선 법체계는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 분리형(통신법, 방송법), 미국·영국(통신법에 방송법 첨부), 이탈리아·말레이시아(통신법과 방송법 융합)와 같은 법령 통합형, 그리고 독일(정보통신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 협정), 일본(전기통신의무를 이용한 방송법)과 같은 제3의 법 제정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별로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매체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통신사업자와 CATV사업자간 상호진출을 허용하고 있고, 1996년 통신법에도 새로운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전기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의 분리에 입각해서 보편적서비스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에도 CATV에서 시청자의 선택을 위한 양방향 서비스의 존재를 명시함으로써 데이터 방송, VOD 등의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2003년 6월 3일에는 인터넷과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대중 미디어의 다양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한 방송국의 시장점유율(시청가구 기준) 규제를 완화(35% → 45%)했다. 영국은 1996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디

지탈방송 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허가제를 명시하였으며, 방송서비스에 일반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이외에 여유대역을 활용한 '디지털부가서비스' 개념을 규정하여 양방향 방송서비스 등의 제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통신 방송 통합법인 Communications Bill을 제정하여 이종매체간 교차소유, 라디오주파수 거래 허용, 면허제 폐지, 규제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에 대한 재규정, 기술중립의 원칙 등을 도입함으로써 융합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는 1985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CATV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 진입을 허용하였으며, 1989년 CS방송에서 수위탁 방송제도를 만들어 통신사업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2001년에는 CS방송 및 유선텔레비전 방송의 설비비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업무이용 방송법을 제정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방송서비스의 경우 등록에 의해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률에 의해 2002년 7월부터 사업자 등록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 5월부터 BB Cable이 이후 BB의 ADSL망을 이용해 다채널방송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통신방송융합이란?

통신과 방송의 경계 무의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진화

'통신-방송 융합'이란 디지털 기술발달로 인해 대두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으로,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

즉TV나 라디오로만 볼 수 있던 방송 콘텐츠를 휴대전화나 개인휴대단말기, 차량용TV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방송과 달리 방송을 보는 도중에도 정보검색이나 e메일 사용을 하는 등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첫째로 '망의 융합(convergence of network)'이 있는데, 이는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점차 불명확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방송이 방송망뿐 아니라 통신망을 통하여도 전송되며 또 통신도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망을 통하여도 행하여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CATV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FM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무선호출서비스,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 of service provision)'은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수신을 목적으로 하거나 양방향성의 서비스를 내보내며, 통신 분야도 다수의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일방향성 서비스가 증가하고 통신망의 대역폭 증가 등의 이유로 영상 서비스의 제공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셋째로 '기업의 융합(convergence of corporate organizations)'은 방송사업자가 통신사업을 하며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의 예로는 데이터방송, DMB, DMC 등이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등장한 인터넷방송이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도 '방송-통신 융합'의 예로 볼 수 있다.

'데이터방송'은 텍스트, 정지화, 그래픽, 문서, 소프트웨어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은 기존에 디지털오디오방송(DAB)으로 불리던 것으로, 초기의 DAB가 최근 들어 이동형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는 물론 양방향 동영상과 데이터서비스를 포괄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로 발전하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동 또는 고정된 장소에서 이동 단말기를 통해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으로, 전송 수단에 따라 지상파DMB와 위성DMB로 구분된다.

'디지털미디어센터(DMC: Digital Media Center)'는 통신설비, 방송제작 및 송출장비, 부가서비스 시스템을 하나의 센터에 공동으로 구축하여 디지털 케이블 방송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DMC에서 가능한 서비스 및 사업범위는 ① PP프로그램의 재전송, ② 추가적 채널서비스(데이터방송 영역, NVOD, VOD, PPV, EPG등), ③ 인터넷관련 서비스, ④ VoIP 등 통신서비스 등이다.

통방융합의 대세를 거역하는 트립잡기식 시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흥식, 이하 IT연맹)은 수차례 문제제기와 대화제의를 불구하고 언론노조에서 또 다시 정통부의 자체 기구개편(통방융합)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전파방송정책과 정보통신진흥국을 통신방송정책본부로 통합한 것을 두고 방송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통부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는 합법성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와이브로 기술, IP-TV, HSPDA 등 한국의 통신기술은 유럽 및 전세계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 통신업체와의 기술제휴를 앞두고 있는 등 국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IT강국 특히 통방융합 기술이 유독 한국에서 반대와 차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는 막연한 불안이 이야기하는 힘있는 방송분야의 집요한 방해와 협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협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정통부의 자세에 그 원인이 있다. IT연맹은 오래 전부터 언론노조에 의해 과학기술의 진보가 방해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이로 인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양질의 통신방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국민을 위한 통방융합 발전을 위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언론노조에 두차례 대화를 제의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대답을 듣지 못한 바 있다.

IT연맹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실력행사에 통방융합문제가 계속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IT연맹은 통방융합의 대체로 반대로 사사건건 시비하고 트립잡는 행위는 이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통부는 언론방송 눈치를 보면서 통방융합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도리어 방송업체(케이블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을 허락하는 정책(2006년 3월 7일 한국케이블텔레콤에게 인터넷전화 사업허가권)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한 태도이며 통신망계의 저항을 불러일으킬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정통부에게 요구한다. 진정 통방융합 실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면, 주변 눈치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사업계획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조직강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월 23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200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사업계획을 요약해 조합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편집자풀이>

사업방향
2006년 KT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공정위 과징금 등 외부적 요인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사측은 이를 이용해 공세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지만 노동조합은 조직적 결의를 통해 이를 돌파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완전복지 실현을 위해 애진할 것이다.
2007년 복수노조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자칫 방심할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체계가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을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분하되 그 목표는 전체 노동조합 조직의 혁신과 강화에 맞출 것이다.

사업계획

1. 조합원의 고용안정

가. 경영참가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

- ①. 우리사주조합 확대
- 중점내용: 25.2%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전환 추진
-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우리사주 조합주식 확대
- 추진방식: ESOP 출원, 차입형우리사주제 도입
②. 우리사주조합 민주적 운영
- 중점내용: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활성화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로 노동조합 경영참가 활성화
- 추진방식: 선진형 조합운영 사례 실태파악 및 연구검토
결원 이사,감사 선출
결원 대의원 선출
③. 우리사주조합 관련 대정부 정책제안 활동 강화
- 중점내용: 전문가그룹 및 상급단체와 연대 활동
- 추진방식: 우리사주조합 정책연구 모임, 토론회 및 세미나참석
④. 노동조합 사외이사 추천 투쟁
- 중점내용: 조합원 및 소액주주 대상 의견권 위임장 확보/ 금융권 노동조합과 연대를 통한 의견권 확보
- 추진방식: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담위성 교육 및 우편 의견권 행사 방법 도입 주중 투쟁 전개
⑤. 노사대토론회
- 정기적 토론회 개최를 제도화
- 토론회 결과는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⑥. 회사경영 매분기결산 및 경영 분석 회의
- 중점내용: 분기별 결산보고서 분석 회의 및 경영방향 설명회 개최 요구
- 추진일정: 결산보고서 분석회의: 분기별 / 경영방향 설명회: 전반기,하반기

2. 조직혁신 진단 및 강화 계획

가. 복수노조 대비 조직혁신 진단 및 대책 마련

- <중점내용>
-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 시급
- 복수노조 및 산별전환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KT노동조합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진단 실시(외부영역)
- KT조합간부들의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

나. 교육사업강화

- ①. 배경
- 외부강사로는 KT노조에 대한 이해력과 현실성 떨어짐
- 이론훈육 연계, 집회 등 현장에서 교육 모색 가능

- 간부 역량 강화, 신입간부 발굴 및 집중육성
- IT연맹과 공동 교육안 마련
②. 공동교재 개발
- KT노동조합에 맞는 간부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재의 현실화 필요
③. 조합간부 집체 교육
- 현장중심의 조직활성화,교육사업을 통한 조합간부의 정예화
- 추진방식 : 신입 조합간부 집체교육 1박2일
조합간부(중앙,지방상집,지부장,분회장) 집체교육 2박3일
IT연맹과 공동 교육강사단 구성 교육실시

3. 연대사업 및 정치사업 강화

가. 총연맹과의 연대강화

- ①. 지역본부 활동 적극결합
- 지역 연대활동비 지원
- 지역집회 및 의결기구 적극 참여
②. 전국노동자대회 등 중앙집중행사 참여
- 범위 : 대규모 행사에는 전국조합간부 참석
- 방법 : 중앙의 단독 지침보다는 지방본부 및지부장의 결의에 의한 지침 마련
- 조합간부 교육의 장으로 적극활용
· 중앙의 철저한 준비(집회참여의 의의, KT의 현상황 등에 대한 선전자료 등)
· 사전 집회열고 현장 의견수렴 및 조합간부 소양교육
· 교육에 대한 실천의 장으로 승화(지부조합간부 역량강화에 필요)

나. 정치사업강화

- ①.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독려
- 배경 : 민주노동당에 대한 영향력 강화, 과기정위 소속 의원배출
- 대상: 조합간부 및 조합원
②. 정치후원금 적극 추진
- 중점내용 : IT분야 소속 정당인의 정치활동 후원 통신정책 확보.
- 추진방식 :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통한 후원회 결성.
③.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 발굴 확보 지원추진.
- 중점내용 : 노동자 정치 참여와 정치세력화를 통한 기회 확보.
지방자치단체 선거출마 조합간부 발굴 지원
- 추진방식 : 조합 정치위원회를 통한 적극 지원.

다. 유무선통합,통방융합등 통신정책활동 확대

라. 통일교류사업 확대

- ①. 통일선봉대: 중앙간부 중심의 선봉대 탈피, 지부장의 참여 적극 권장
- 배경 : 노동자 연대 교류를 통한 통일사업 추진, 분단현실 및 통일사업에 대한 인식 공유, 조합간부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방식 : 총연맹, IT연맹 통일사업에 적극결합 및 IT 남북노동자 교류 추진모색(개성공단 방문, 개성 마라톤 참여, 통일 선봉대 참여)
- 중앙지원 통일선봉대 모집
전일정 참여가 어려운 일부 지부장은 각 지역행사시 적극 참여 권장
②. KT개성지사 방문 및 북체신직업총동맹과 만남 추진
- 배경: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체신과 교류를 통한 통일사업 지원

마. 동아시아통신노조 포럼

- ①. 중점내용
- 포럼의 참가자 확대: 3국 포럼을 확대 실질적인 동아시아통신포럼이 될 수 있도록 확대
- 연대의 질 강화: 노동조합 및 통신정책에 대한 실질적 정보교환 및 공동행동 필요
포럼 참가시 각 국별 규약규정 및 단체협약 교환
각 국별 올해의 정부정책(통신부문) 교환
②. 참가국: KT, NTT, CTWU
- 초청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UNI-APRO통신분과

위원장과 간담회

인력구조 조정은 조합의 모든것을 걸고 막아낸다

대의원대회 첫 날 전국대의원과 위원장이 간담회 시간을 갖고 현장의 고충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Q 비보직 3급 명예퇴직을 3월 31일자로 실시한다는 문서가 올랐다. 그러면서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타직무로 발령을 낸다고 한다. 안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명예퇴직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A 인력구조조정은 선거 때도 누누이 밝혀왔다. 저는 특별명예퇴직을 반대해왔고 만약 그러한 문서가 있다면 사정된 진운동을 전개하겠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진행된다면 2000년 명성파업이 재현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께 밝히지만 인력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쟁의발생을 결의해서 파업에 돌입하도록 하겠다.

Q 현재 대학장학금을 2명에 한해 8학기까지 지원토록하고 있는데, 3명까지 확대할 수 없다면 한명이 8학기를 다 못채울 때 인원에 관계없이 8학기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A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기금상황으로 어렵지만 발급 전 대의원의 건의 사항은 매우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적극 검토하겠다.

Q 지금 현장은 생산성 달성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A 현재 문제점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정부분 회사와도 협의진행중에 있다. 대의원대회를 마치고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진척된 상황을 알려드리겠다.

Q 회사에서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년 연속 D등급을 맞은 사람이 급속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는 위에서 지침을 내려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전국적인 문제라면 이를 알아보고 해결했으면 한다.

A D등급으로 인한 급속승진 누락 문제

는 6대 집행부부터 꾸준히 누적돼 왔다. 저는 작년부터 징계대상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한지봉세가족이었을 때 고객센터와 영업국이 업무지식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현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A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지식으로 축소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또한 노동강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다.

Q 초고속인터넷 전전배치장비가 AC전원이다 보니 정전발생시 바로 VOC발생하며 지사와 네트워크간 책임문제까지 확대된다. DC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전발생에도 문제가 없으니 DC장비로 교체토록 관심을 가져달라.

A 일단 현장 품질 VOC는 평가에서 제외됐으니 실태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또한 조직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그동안 망과 지사의 통합을 요구해오고 있으며 9대 집행부 초반에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가겠다.

Q 예년에는 2~3월이면 성과급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확정됐던 것으로 안다. 과연 조합과 회사가 어느정도까지 의견이 접근되었는지 알고 싶다.

A 회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회사는 차등폭을 늘리자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현행 유지는하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매년 지급시기를 논의하지 말고 이번을 계기로 지급시기를 확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달라.

Q 전환직으로 인해 현장조직이 많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A 솔직히 말해 전환직 문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회사는 절대 전환직을 순순히 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이 약화되는 경향도 있지만 조합원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어찌했든 빠른 시일내 전체가 전환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

지방본부대의원대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
Table with 2 columns: 건의 사항, 조치 사항. Lists 17 items regarding benefits, safety, and union activities.

KT노동조합 전국조합간부 리더십 교육 시행

노동조합 9대 집행부의 중점사업중 하나인 2006년도 교육사업 계획에 따라 전국조합간부 전문과정 리더십 교육을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2박3일간 지부·분회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조합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 1. 교육의 필요성
- 조합활동 자주성 및 실무능력 배양과 가치관 부여
- 노동정세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재편 조합활동 대비
-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와 혁신

-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4월19일 ~ 5월24일까지 (6기수)
- 장소 :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3. 교육대상
- 지부장, 분회장, 여성국장, 여성대의원

- 4. 주요 교육내용
- 올바른 조합관, KT노조 조직실태, 경영참여, 간부의 역할과 자세,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산업안전 보건법 및 후생복지, 선전,선동,울동가요, 위원장 간담회, 분반토론

5. 교육세부 일정

Table with 3 columns: 기수별, 교육일정, 인원. Shows the schedule and number of participants for each cohort.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한발 다가섰다

노동조합 추천 감사위원 석패했지만 소액주주의 지원은 놀랄만 했다

노동조합이 추천한 감사위원의 진출은 실패했지만 소액주주의 지원은 놀랄만했다. 노동조합은 10일 열린 KT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 집중투표를 통해 송덕용 감사위원 후보를 지지했으나 석패했다.

최광수 정책실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들의 수년동안 활동을 보면 안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의 없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제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송덕용 후보가 감사위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안설명이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실시된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후보자	합계
김도환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추천)	137,410,796
윤종규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추천)	125,124,511
송덕용 (KT노동조합 추천)	20,601,337

위 결과는 최종 웨도우보팅의 표까지 합계된 것으로 예상외의 주식이 지지비율에 따라 더해질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사외이사 진출의 관건은 우리사주조합 주

18,000,000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 우리사주조합에서 모은 주식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주주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들의 지지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에서 모은 주식보다 많았다. 소액주주들은 55만주 이상을 송덕용 후보에 몰아주어 노동조합조차 놀라게 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소액주주들이 투명경영과 외국인분에 대한 대항마로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경영참여는 갈수록 노골화 돼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7일 주총이 치뤄진 KT&G의 경영권 분쟁결과 해지펀드 칼라이칸이 사외이사 1명을 진출시켰다. 이제 KT&G의 경영권분쟁은 장기화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KT&G의 경영권 분쟁으로 얻은 교훈은 분산된 지분구조가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외국인 펀드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일반적으로 외국주주 특히 펀드들은 인원감축, 자산매각, 사업분할 등을 통해 단기 수익에 매우 집착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그 특성상 1년, 3년, 5년, 7년 등의 프



그램에 따라 단기간 최대의 수익을 거둬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전방위로 요구해오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의 인력감축과 배당에 맞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함께 KT의 신사업 창출을 위한 장기투자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웨도우보팅(Shadow voting): 중립투표·중립투표는 중립투표대상이 되는 투자가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투표한 투표수의 비율대로 기관투자자의 투

표수를 분할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주식총수가 100만주짜리 회사에서 주주총회에 참가한 일반투자자는 30만주 중립투표를 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지분은 30만주라고 하면 일반투자자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찬성은 20만주 반대는 10만주라고 한다면 중립투표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자신의 30만주를 자동으로 찬성에 20만주 반대에 10만주를 투표하게 되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의 주식수인 50만주이상 투표기준을 넘기면서 투표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전비 상향조정 합의 이사비용 실비수준으로 상향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합의된 이사비용 실비보상에 따른 세부금액을 합의했다. 기존 실비에도 못미치는 이전비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이사비용 실비보상을 요구하고 합의한 바 있다. 이전비 인상은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 후속합의(2006년 3월 9일)**
- 지급기준 조정
 - 지급액 상향 : 350,000원 ~ 500,000원
 - 기준거리 조정 : 20Km 이상 => 100Km 이상
 - 지급조건
 - 부임후 가족 이전시에만 증빙제출에 의거 이전비 정액지급
 - 시행일 : 2006.1.1
 - (※ 단 이전지침에 의하여 지급된 이전비에 대하여는 불이익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의결사항 9항 전보발령에 따른 이사비용 실비보상요구

"이전비는 상향조정키로 하고 그 세부 내용은 협의를 거쳐 2006.1.1일자로 시행한다"

2006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임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및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결과

임원
 김병탁 사무처장, 최광수 정책기획실장, 류춘용 조직처장
 회계감사: 정윤길(강북지방본부), 유기수(강남지방본부), 조상환(서부지방본부), 안태복(부산지방본부), 김진욱(전남지방본부), 이광욱(전북지방본부), 고영천(제주지방본부)

중앙위원
 강북: 이윤근, 김용위, 김종열, 이종명, 이진구, 강경주
 강남: 지재식, 이현광, 최광수, 이봉규
 서부: 김병탁, 이용각, 유대종, 김인관, 김희원
 부산: 정윤모, 이호우, 박하린, 정해준, 최재상, 임태복
 대구: 김해관, 김근주, 한호섭, 이영태
 본사: 김구현, 박경윤, 손승욱, 김신, 윤오원, 황종욱, 임종태
 전남: 류춘용, 김성수, 정욱채
 전북: 양정우, 장인태
 충남: 서윤수, 김경찬, 서중모
 충북: 김유정
 강원: 권혁웅, 김인기
 제주: 조순호

중앙집행위원
 중앙본부: 지재식, 김해관, 김병탁, 최광수, 류춘용
 강북: 김태호, 문순홍, 정상길
 강남: 이현광, 김성락, 박종일
 서부: 이용각, 김영필, 김오철
 부산: 정윤모, 이호우, 박상인
 대구: 김근주, 김희식, 여성동
 본사: 김구현, 김신, 한대웅, 김용범
 전남: 임종태, 서봉원, 정광우
 전북: 양정우, 신환균
 충남: 조중오, 박종오
 충북: 이성기, 박상순
 강원: 권혁웅, 김경수
 제주: 고희관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지재식, 김해관, 김병탁, 류춘용, 한호섭, 최광수, 장인태, 유경규, 김인자, 윤일성, 김성수, 김배정, 강인석, 손승욱, 김희식, 김영삼, 서정녀, 김태호, 윤준산, 김순신, 정윤모, 이호우, 박호근, 김근주, 이영태, 이선희, 김구현, 김신, 이미애, 이용각, 김인관, 유미경, 이현광, 임병태, 조중오, 허은경, 이성기, 임종태, 권혁웅, 양정우, 조순호, 최훈덕, 방미애

민주노총 파견 후보대의원
 박성규, 정상길, 김용만, 김순영, 한정화, 김용위, 강윤식, 이창주, 김석희, 박종국, 이효순, 신인경, 신세영, 한창성, 신양호, 윤세철, 이봉규, 이강섭, 신성기, 이종철, 정상환, 최해철, 정상철, 오상희, 김미연, 오혜숙, 조일환, 김관기, 김준규, 김건국, 임범기, 장경석, 김윤철, 김희태, 김중기, 김태영, 양선희, 박영자, 강미숙, 김석득, 박상인, 김인제, 유옥전, 황성관, 배우일, 정영식, 전태현, 허인택, 이영자, 윤오원, 김희철, 한대웅, 이성수, 임종태, 황종욱, 김석원, 임동철, 문덕규, 홍익표, 김용범, 금형미, 조혜성, 유인석, 안환선, 서봉원, 김옥선, 신환균, 이광욱, 임인희, 서미숙, 서윤수, 박종오, 김명길, 박경순, 홍명숙, 복진경, 김유정, 정숙영, 전형집, 김창수

IT연맹 파견 대의원
 지재식, 김해관, 김병탁, 류춘용, 최광수, 김태호, 이현광, 이용각, 김구현, 정윤모, 김근주, 임종태, 양정우, 조중오, 손승욱, 서정녀, 김인자, 김순신, 유미경

IT연맹 파견 후보대의원
 이희창, 전영복, 임광호, 박종진, 임병태, 김종윤, 최영근, 조성명, 김인관, 조일환, 김찬기, 김준규, 이호우, 김석득, 이영태, 김신, 윤오원, 한대웅, 황종욱, 김용범, 서봉원, 신환균, 서윤수, 박종오, 이성기, 권혁웅, 김인숙, 윤해자, 서미숙, 김세희, 이희선, 양선희, 이선희, 정숙영, 김옥경

“여성조합간부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자”

여성국장 · 여성대의원 IT연맹 여성수련회 참석

IT연맹의 '여성간부 수련회'가 KT노동조합의 여성국장, 전국대의원 등 30여명의 여성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부터 1박 2일로 봉도수련회에서 '성차별 반대'의 주제로 열렸다.

IT연맹 박흥식 위원장은 임소식을 통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여성이 노동조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만 스스로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조합간부 육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식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KT노동조합은 여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여성할당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 지부대회에서도 내부지침을 통해 여성대의원의 선출을 장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KT노동조합에 26명의 여성대의원이 당선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여성조합간부가 더욱더 양산되길 바란다"

고 역설했다.

이후 교육을 통해 스웨덴 여성노동정책, 성평등과 여성정치참여, 여성간부의 리더십훈련으로 구성된 강의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 및 노동조합에서 여성간부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성평등과 여성정치 참여 시간을 통해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은 "여성조합간부들이 일반조합원의 시각을 벗어나 여성조합원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여성 조합간부와 대의원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 사업장의 성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인지적 시각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전 부문을 포괄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녁식사 후에 열린 분임토의는 뜨거운 열기속에 새벽3시가 돼도 끝나지 않았다. 조합간부로서 정체성과 현장조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더불어 중앙집행부에 직감내 탁아소 설치



문제, 수련관 생활임소문제, 단체복 지급 계획 등 복지개선을 건의했고, 노동조합이 이번 수련회와 같은 교육시간을 더욱 많이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성할당제를 앞으로 더욱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1박2일간 진행된 수련회를 마치고 용산 구민회관에서 오후2시부터 실시된 3.8 세

계여성의 날 98주년 기념여성대회에 참석했다.여성대회는 '가라! 빈곤차별, 퍼져라! 풀뿌리 여성정치'라는 슬로건으로 빈곤차별을 깨는 당당한 여성이라는 주제의 공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기원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여성정치 실현을 기원하는 상징의식을 가졌고, 용산역까지 행진을 했다.

고(故) 김왕찬 동지 10주기 추모제

추음의 고향에서도 노동자의 아픔을 짊어지며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던 고(故)김왕찬 동지의 10주기 추모제가 3월 4일 북제주도 제주시 가족공동묘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생전 고인의 조합활동을 회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조합원들의 마음기림과 열의를 다졌으며 고희관 제주지방본부위원장, 중앙본부 김희식 산업안전국장, 고대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비롯한 조합간부와 가족 50여명이 참석했다."

고(故) 김왕찬 동지는 ...

1974년	한양통신에 입사해
1991년	제주고산지부장
1994년	5대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을 역임
1996년	3월 지병으로 유명